
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(2018-2022)

2019년도 시행계획

2019. 2.



보 건 복 지 부
보 육 정 책 관

순 서

I.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개요	1
II. 2018년 주요 추진성과	4
III. 2019년 시행계획	
1. 추진방향	7
2. 세부 추진과제	8
<과제 1> 보육의 공공성 강화	9
<과제 2> 보육체계 개편	19
<과제 3>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	25
<과제 4> 부모 양육지원 확대	37

I.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(2018-2022) 개요

1 추진 배경 및 경과

□ 추진 배경

- 보육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새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「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(‘18~’22)」 마련(‘17.12월)
 - * 「영유아보육법(제11조)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
- 국정과제 ‘보육·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’ 실현을 위한 보육의 공공성, 서비스 품질향상 관련 4대 분야 14개 과제 제시
-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·시행하고, 매년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보완·수정

□ 그간의 경과

- ‘06년에 제1차 보육 중장기계획(새싹플랜, ‘06~’10) 수립 시행, ‘09년에 새싹플랜을 수정·보완한 「아이사랑플랜(‘09~’12)」 마련

“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”을 비전으로 6대 추진과제 설정

- ①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, ② 수요자 맞춤 지원, ③ 보육시설 질 제고 및 균형 배치, ④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, ⑤전달체계 효율화, ⑥ 보육사업 지원체계 구축

- ‘13년에 「제2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(‘13~’17)」 마련

“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”을 비전으로 6대 추진과제 설정

- ① 부모의 보육·양육 부담 경감, ② 수요자 맞춤형 보육·양육지원, ③ 공공성 확대와 품질 관리 강화, ④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, ⑤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, ⑥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

- ‘17년 12월에 「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(‘18~’22)」 마련하고, ‘18년에 이어 ‘19년 시행 계획 수립 추진

2

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추진 방향 및 성과 지표

1

비전 및 체계도

□ “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”를 비전으로

- ① 보육의 공공성 강화, ② 보육체계 개편, ③ 보육서비스 품질향상, ④ 부모 양육지원 확대의 4개 분야 14개 추진과제 설정

비전

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

목표 및 전략

보육의 공공성 강화

- 1. 국공립 이용률 40%로 확대
- 2. 국공립 운영의 공공성 강화
- 3. 직장어린이집 활성화
- 4.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

보육 체계 개편

- 1.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선
- 2.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
적정 보육료 지원
- 3. 보육과정 개편

보육서비스 품질향상

- 1.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
- 2.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
- 3.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
- 4.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

부모 양육지원 확대

- 1.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지원
- 2.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
- 3. 취약보육 지원 개선

2

보육의 미래 및 달라지는 지표

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

국가책임보육 기반 조성(~'17)

- 어린이집의 양적 확충
-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
- 부모교육 등 편의 증진

보육·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대

- 우수한 보육서비스 제공
- 어린이집의 공공성과 신뢰 증진
-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

분야	지표	'17년	'22년
보육의 공공성 강화	· 국공립어린이집 확충	이용률 14%	이용률 40%
	·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	81.5%('16년)	90%
	· 열린어린이집	1,859개소	5,750개소
보육체계 개편	· 보육지원체계 개편	맞춤형 보육 (12시간반, 6시간반)	지원시간 다양화
	· 표준보육과정 개선	'13년 기준	개정·보급
	· 표준보육보육비용 재계측	'14년 표준보육비용	표준보육비용 재계측
보육서비스 품질향상	· 보육교사 양성체계	학점제	학과제
	· 보수교육 관리	시·도 개별	총괄관리기관 운영
	· 보조·대체교사 지원	2.1 만명	2.8 만명
	· 보육교사 처우개선비	0-2세 22만원 3-5세 30만원	보육료 인상과 연계해 처우개선
	· 평가인증제도 개선	평가인증제도 (신청 어린이집 평가)	평가제도 (모든 어린이집 평가)
부모 양육지원 확대	· 부모교육 실시 인원	연 9만명	연 30만명
	·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	전국 87개소	전체 시군구 지원
	· 시간제 보육반 확대	380개반	점진적 확대

Ⅱ. 2018년 주요 추진성과

1. 보육의 공공성 강화

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기반 조성

- 당초 목표(450개)보다 28% 초과 달성한 국공립 어린이집 574개 확충, 민간어린이집 71개를 국공립 장기임차 방식으로 전환
 - 국공립 신축 지원 한도 인상(40%↑)*, 민간 어린이집 매입 지원단가 상향(100%↑)**, 지자체 자체설치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실시(46개소)
* (기존) 3.27억→ (개선) 4.61억 / ** (기존) 2.1억원→ (개선) 3.92억원
-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*(50세대 이상 공동주택)하고, 국·공유 재산의 어린이집 무상 사용 근거, 교내 유휴 공간의 돌봄 시설 설치 가이드 마련

□ 직장 어린이집 확충

- '17년 대비 의무이행율 5.2%p 증가(81.5%→86.7%) 직장 어린이집 58개소 설치('17년 1,053개소 → '18년 1,111개소)
-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 독려*
* 미이행,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 공표(5.31), 이행강제금 부과(회당 최대 1억)

□ 어린이집 운영 건전성 제고

- 「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」 수립('18.10), 부정 의심 2,064개소 집중점검, 부정수급 처벌 강화(기준액 3백→1백)
- 공공형 어린이집 재선정 기준 강화, 운영비 지급 기준을 인상*해 안정적 운영여건 조성(담임교사 당 인원에 따른 운영비 지급기준 : 월 35만원 → 40만원)

2. 보육 체계 개편

□ 보육과정 및 지원 체계 개선 모색

- 누리과정 개정을 위한 간담회, 자문회의 등 각계 의견 수렴(수차례)
- 보육체계 개편 TF 구성·운영('17.9월~'18.8월), 정책토론회(8월), 부모 의견수렴 토론회(10월) 등을 거쳐 **개편의 기본방향 마련**
 -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로드맵에 반영(12.7)하여 추진기반 마련

□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보육료 지원

- 표준보육비용 계측 주기(3년), 결정절차(중앙보육위원회 의결) 등 정비, **표준보육비용 산정 실시**
- 부모보육료 3%, 기본보육료* 10.9% 인상 등 **보육료 단가 인상**
 - * 부모보육료 외에 민간어린이집은 아동 수에 따라 기본 보육료 산정, 국공립 어린이집은 기본 보육료를 산정하지 않고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

3.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

□ 보육 질 관리 및 교사 처우 개선

- 휴게시간 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**보조·대체교사 투입 확대***, 누리교사 **처우개선비 인상**(30만→33만원, 국회 예산확보, '19년 적용)
 - * (보조교사) 2.5만명('18)→4만명('19), (대체교사) 2천명('18)→2.7천명('19))
- 정원 초과 반편성 시 허용 사유를 제한하고 **추가 수입의 30%를 교사에게 지급토록 요건 강화**('18.1월)
- 학과 중심의 자격 취득 체계 구축 방안, 장기 미종사자 교육과정 개발 등 **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**을 위한 연구 용역 실시

□ 상시적 품질 관리

- 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를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제로 전환 및 한국보육진흥원 **법정기관화**(’18.12월 개정, ’19.6월 시행 예정)
 - 평가 방식도 서면 평가에서 관찰, 면담 중심의 비중을 높이고 평가 지표도 아동의 안전, 인권을 중점적으로 평가토록 개선(’18.10월)
-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‘어린이집 이용불편·부정신고센터 및 현지조사 지원’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시스템(행복e음 등)도 연계
- 부모의 일상적 참여를 보장하는 ‘열린 어린이집’ 운영 활성화를 위해 대상 선정도 대폭 확대*하고 지도점검 유예 등 혜택 부여
 - * 열린어린이집 선정 현황 (’17) 1,857개소 → (’18) 3,404개소
- 안전 교육(보육교사 등 42천명), 부처 합동 안전 점검(12천개소), 공기청정기 보급 등 영유아 건강 및 안전 기반 강화
 - * 공기청정기 53,479대,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25,022대 설치(’18년 추경)

4. 부모 양육지원 확대

□ 부모의 양육 역량 및 보육서비스 확대

- 신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온라인 교육 실시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, 육아종합지원센터 4개소를 확충해 교육 공간 확충
-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을 확대(288천건→332천건, 15%↑)하고, 보육료 지원인상(본인부담 시간당 2천원→1천원), 제공 시간도 확대(자격 구분 없이 80시간)

□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지원 확대

- 장애아전문·통합 어린이집 확충(전년대비 53개소↑), 장애아반 담당 교사 인건비 2.3% 인상, 장애아동 담당 교사 수당 인상(20→30만원)

Ⅲ. 2019년 시행계획

1 추진 방향

- 제3차 중장기보육계획(2018~2022)의 2년차 추진 성과 달성에 역점
 -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, 보육·대체교사 지원 등 주요 국정과제는 기존 설정한 성과지표의 조기 달성 등 성과 창출 가속화
 - '18년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구체화한 과제들은 '19년도에 제도 개선 방안 마련·시행 등 차질 없는 과제 이행 추진

< 주요 정책 방향 >

- ◆ 국공립 어린이집을 '19년부터 기존 계획 대비 매년 100개소 추가 확충(550개소)하여 '공공보육 이용아동 40%' 조기 달성
- ◆ 보조교사 확충 등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 및 자격체계 개편을 통해 우수 전문인력이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
- ◆ 표준보육비용을 반영한 보육료 현실화,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보육서비스 이용 기반 마련
- ◆ 전체 어린이집 대상 의무 평가제 시행, 및 부정 신고·점검 전담조직 신설을 통한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강화

2

세부 추진과제 목록

분야	추진과제	주요 내용
1. 보육의 공공성 강화	1-1.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% 확대	지방의 국공립 확충 및 균형배치 여건 개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식 다양화 매년 450개소 이상 확충
	1-2.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강화	국공립 어린이집의 공적 역할 확대 민간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등 질 관리체계 운영
	1-3. 직장어린이집 활성화	직장어린이집 직접설치 확대 및 의무이행률 90%로 확대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확대 (고용부 협조)
	1-4.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	공공형 어린이집 관리 강화 협동조합 등 비영리적 운영주체 참여 보장 어린이집 관리 역량 강화 어린이집의 재정 건정성 강화
2. 보육체계 개편	2-1.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 체계 개선	어린이집 보육 지원 체계 개선추진 부모 선택기전 보장과 적정 보상체계 마련
	2-2.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	표준보육비용 재계측 적정 보육료 지원 및 부모부담 기준 정비
	2-3. 보육과정 개선	영유아 특성에 맞춰 표준보육과정 개선
3.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	3-1.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	보육교사 학과제도 도입 보수교육 과정 내실화 체계적 보수교육 운영을 위한 종합관리
	3-2.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	보육교사의 적정 임금 지급 보육교사 보조인력 지원확대 교사 업무부담 경감
	3-3.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	영유아 반 구성기준 개선 어린이집 시설 기준 강화
	3-4.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	모든 어린이집 대상 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 어린이집 지도점검 체계개선 어린이집 건강 및 안전관리 강화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여건 개선
4. 부모양육 지원 확대	4-1.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지원	부모교육 및 양육정보 제공 확산 가정양육 서비스 확대
	4-2.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	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시간제보육 지원기준 개선
	4-3. 취약보육 지원 개선	취약보육대상 재검토 및 실태조사 취약보육 특성별 보육지원 개선

과제 1

보육의 공공성 강화

1-1

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% 확대

<과제 내용>

- ◇ '22년까지 매년 450개소 이상 확충 추진
- ◇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식 다양화
- ◇ 지방의 국공립 확충 및 균형 배치 여건 개선

□ '18년 추진실적

○ 국공립어린이집 574개소 확충

- 확충방식 다양화, 국비지원 확대, 민관협력 강화 등을 통해 당초 목표(450개소)를 124개소 초과하여 달성(30%↑)

○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시설부지 확보

-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 설치 의무화 및 국·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 마련
- 학교 유휴공간 내 돌봄시설 설치 관련 복지부·교육부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

○ 국공립 장기임차 민간어린이집 71개소 선정

- '18년 국공립 장기임차 방식을 신규 도입하여, 지침 제정·배포, 지자체 수요조사 및 현장확인, 중앙 심의(3회) 등 실시

○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완화

- 국공립 신축의 국비 최대 지원 한도 인상(3.27억→4.61억) 및 민간 어린이집 매입 지원단가 2배 상향(2.1억원→3.92억원)
- 지자체 자체 설치 어린이집 인건비 국고 지원(46개소)

□ '19년 추진계획

○ '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%' 조기 달성('22→'21)*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이상 확충(기존 450개)

* 저출산·고령사회 정책 로드맵('18.12.7) 및 '19년 경제정책방향('18.12.17) 반영

○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식 다양화

-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('18.12월) 관련 하위법령 정비 완료
- 기존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촉진을 위해 입주민 시설·환경 개선비 지원금 '20년 예산안 반영 추진
- 지자체 수요조사, 현장점검, 국공립 장기임차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국공립 장기임차 시설 100개 이상 선정(임차기간 중 문제 발생 기관은 퇴출)

○ 지방의 국공립 확충 및 균형 배치 여건 개선

- 국공립 확충사업 서울-지방 간 차등보조율 도입 지속 협의 및 지자체 자체설치 국공립어린이집 국고지원 확대(46 → 102개소)
- 신축비 지원(하나금융 MOU), LH 공공주택 내 국공립 설치 협력 등을 통해 지방 재정부담 완화

□ 19년 추진일정

시기		주요 내용
'19년	1/4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1월) 자체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확대 ▪ (3월) LH 행복주택, 신혼희망타운 내 국공립 설치 지자체 협의
	2/4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6월) 민관협력(하나금융) 국공립 신축비 지원 ▪ (6월)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정비 완료(공동주택 국공립 설치 의무화) ▪ (6월) 제1차 국공립 장기임차 심의위원회 개최
	3/4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8월) 기존 관리동 시설·환경개선비 '20년 예산 반영 ▪ (9월) 제2차 국공립 장기임차 심의위원회 개최
	4/4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11월) 제3차 국공립 장기임차 심의위원회 개최 ▪ (12월)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이상 확충 지원 ▪ (12월) 확충 추진상황 점검 및 목표 재설정 검토

□ 소요 예산

○ 국공립어린이집 확충

(단위 : 백만원, 개소)

구 분	2018년 예산			2019년 예산(b)	증감 (b-a)
	예산	확정예산(a)	집행액		
○ 사업량(단위 : 개소)	450	450	574	450	-
○ 사업비(백만원)	136,712	136,712	123,921	137,300	588
- 국비	68,384	68,384	61,988	68,840	456
• 일반회계	68,384	68,384	61,988	68,840	456
- 지방비	68,328	68,328	61,933	68,460	132

<과제 내용>

- ◇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적 역할 확대
- ◇ 민간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등 질 관리체계 운영

□ '18년 추진실적

-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신규 설치, 위·불법 발생 등 국공립 어린이집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는 방안 마련
 - * '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 방안' 마련(9월, 사회서비스자원과) 및 관련법 제정안* 발의(5월 남인순의원, 10월 윤소하의원)
- 국공립 장기임차 시설의 적정 선정 및 관리를 위해 국공립 장기임차 지침 제정·배포
 -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·도 회의,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해 장기임차 지침 및 세부기준 교육
 - '국공립 장기임차 심의위원회'를 구성하여, 장기임차 신청 시설 현장조사 및 심의 실시
 - * 장기임차 방식 국공립 전환대상 민간어린이집 161개소 심의, 71개소 선정 및 예산 지원
-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조사 등 지원조직 신설 '19년 예산 확보 (1개 팀, 347백만원)
- '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강화 방안' 정책 연구(4~12월)

□ '19년 추진계획

-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증대를 위한 법령 개정 등 추진(4~12월)
 - 재위탁 시에도 공개경쟁 원칙 적용(법률개정추진), 보육 분야 경력 및 전문성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위탁체 선정기준(고시) 개선
- 설립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 시범 추진*
 - * '19년 4개 시도,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을 포함한 시범사업 추진예정(사회서비스자원과)
- 국공립 장기임차 지침 개정을 통해 사전 적격심사 기준 강화
 - 국공립 확충 지원 전담조직 구성하여 국공립 장기임차 신청 시설 사전 심사 및 현장조사 강화
- 국공립어린이집의 질 개선을 위하여 공공마인드 강화 및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실무지식 교육 등 국공립 운영자 대상 교육과정* 개발
 - * 「국공립어린이집 운영자 대상 실무교육 과정」 연구 용역(3월~)

□ '19년 추진일정

시기		주요 내용
'19년	1/4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1월)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최종계획 수립 및 대상지역 확정 ▪ (3월)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착수 ▪ (3월) 국공립 장기임차 지침 개정 ▪ (3월) 국공립 확충 지원 전담조직 구성 ▪ (3월~)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자 대상 실무교육과정 개발 연구용역
	2/4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4월)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▪ (4월) 공개경쟁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마련 ▪ (4월)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고시 개정안 마련
	3/4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9월)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▪ (9월)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고시 개정 공포

□ 소요 예산 : 비예산

*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에 약 60억원 소요 예정

1-3

직장어린이집 활성화

<과제 내용>

- ◇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 확대 및 의무이행률 90%로 확대
- ◇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확대

□ '18년 추진실적

- 직장어린이집 58개소 설치 확대('17년 1,053개소 → '18년 1,111개소)
- 의무이행률 제고('17년말 기준 의무이행률 86.7% → 전년대비 5.2%p ↑)
 - (실태조사) '17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의 이행여부 등을 조사*하여 설치의무 이행현황 파악
 - * ('12) 74.3% → ('13) 81.7% → ('14) 75.0% → ('15) 52.9% → ('16) 81.5% → ('17) 86.7%
 - (명단 공표 등)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및 조사불응 사업장(101개소) 명단 공표(5.31) 및 지자체 후속조치*
 - *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
-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'18년 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(2~11월)를 통해 총 15개소 선정·지원

□ '19년 추진계획

- 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개선
 -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실태조사에 참여토록 사전홍보 강화* 및 실태조사 방식 개선을 통한 조사응답기간 연장**
 - * 전국 세무서 및 고용청 등 홍보리플릿(12만부) 배부 및 홈페이지 배너 게재
 - ** ('18) 2월중순~3월초, 17일 → ('19) 1월 하순~2월말, 38일 ↑

- **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기준 강화 추진**(영유아보육법 개정)
 -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*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확대(법안 국회 계류 중), 위탁 보육으로 설치 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** 최소화(규제심사 중)
 - * (현행 기준) 상시근로자 500명이상 또는 여성상시근로자 300명 이상
 - ** (예) 보육수요가 적거나 업종 성격상 직접 설치가 어려운 경우 등
- **지자체 협업형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및 중소기업 공동직장 어린이집 5회 이상 공모 추진**(고용부)
 - 민간부분 협업형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, 은행, 대형 건설사와 연계하여 신규 지원모델 발굴 (BK기업은행, 하나은행, 산업은행, LH공사, SK건설 등)

□ '19년 추진일정

시기		주요 내용
'19년	1/4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1~2월) 실태조사 실시 및 설문응답현황 모니터링 ▪ (1~3월) 영유아보육법 개정 추진 ▪ (3월)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대상자 공모(1차) ▪ (3월)직장어린이집 제도개선 등 집중 홍보 ▪ (3~8월) 중소기업 설치 수요조사 연구용역 실시 ▪ (수시)지자체 협업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사업설명회 개최
	2/4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4월) 실태조사 실시 결과 취합 및 분석 ▪ (5월)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등 명단 공표 (5.31) ▪ (6월)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대상자 공모(2차)
	3/4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7~9월)영유아보육법 개정 추진 및 하위법령 개정안 검토 ▪ (8월)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대상자 공모(3차)
	4/4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10월) '20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추진방안 검토 ▪ (10~12월)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대상자 공모(4·5차)

□ 소요예산

- 직장어린이집지원

(단위 : 백만원, 명, 개소 등)

구 분	2018년 예산			2019년 예산(b)	증감 (b-a)
	예산(a)	확정예산(a)	집행액		
○ 사업비(백만원)	145,125	145,125	119,365	162,730	17,605
- 국비	145,125	145,125	119,365	162,730	17,605
• 기금(고용보험기금)	145,125	145,125	119,365	162,730	17,605

<과제 내용>

- ◇ 공공형 어린이집 관리 강화
- ◇ 협동조합 등 비영리적 운영주체 참여보장
- ◇ 어린이집의 관리역량 강화
- ◇ 어린이집의 재정 건전성 강화

□ '18년 추진실적

○ 공공형 어린이집 관리 및 지원 강화

- 238개소 신규 선정, 총 2,376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중

* ('17) 2,265개, 10.7만명 → ('18년) 2,376개, 10.9만명

- 공공형 어린이집 질적 향상을 위해 재선정기준에 보육교직원 전문성 및 처우 관련 기준 등을 추가하여 신규선정 수준으로 강화*

* ('17년) 필수항목(10개) → ('18년) 필수항목(10개)+신규선정 항목(10개)

- 품질관리 컨설팅 실시 대상 확대((재)선정 3년차 → 2~3년차*), 재무 회계 소그룹 교육 확대('17년 50 → '18년 154그룹), 교사연수 대상 확대('17년 1,550 → '18년 2,245명) 등 품질관리 교육 강화

* 2년차 자가진단, 3년차 방문컨설팅

-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'15~'18년간 동결되어 온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급기준 인상(1인당 월 35만원 → 40만원)

○ 보육관련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운영실태, 내실화 방안 등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(5~11월)

-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여 기타운영비 (건물임대료, 건물용자금 이자) 등의 지출한도액을 보육료 수입의 15% 이하로 축소

□ '19년 추진계획

- 어린이집의 공공성 및 관리 체계 강화
 - (공공성 강화) 모든 공공형어린이집을 열린어린이집으로 운영('19.7월) 및 급식·주방 상시 공개 의무화
 - (관리체계 강화) 법정사항 위반* 등 취소사유 강화 및 점검 체계 신설** 등
 - * 필요경비 수납한도 미준수 // ** 운영기준 준수여부 정기점검 및 정보공시 관리체계 마련(연2회)
- 취소 물량 및 운영비 예산 등을 고려하여,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선정 시기 및 규모별 물량을 확정하여 배정·선정(150개소 이상, 19하반기)
 -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 등을 고려하여 운영비 지원기준도 검토
- 협동조합 운영 어린이집 내실화를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 설치인가 기준 및 운영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매뉴얼 개발·배포(6월)
-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「보육교사 자격체계 개편 대책」 마련('19.上)
 - * '1,2급 중심의 자격체계' 및 원장 자격기준 요건 강화, 중간관리직(가칭 원감) 도입 등
- 국공립 어린이집 질적 관리 강화를 위하여 공공마인드 강화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실무지식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('19.上)
- 어린이집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채 인정비율 개선 추진
 - 부채현황 일제조사 실시, 부채 정보의 보육정보시스템 입력관리 강화 및 중장기 부채 인정비율 하향 조정방안 검토

□ '19년 추진일정

시기		주요 내용
'19년	1/4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연중)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사업 시행 ▪ (1월) 어린이집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마련 등 공공형 업무매뉴얼 개정·시행 ▪ (1~3월) 운영비 지원기준 관련 기초데이터 분석 ▪ (2~3월) 카드뉴스 및 동영상 제작 등 공공형어린이집 홍보 강화 ▪ (3월)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등 실무교육과정 개발 연구용역 추진 ▪ (3월~) 어린이집 부채현황 일제조사(착수)
	2/4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4~6월) '20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기준, 재선정 기준 검토 ▪ (6월)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선정 공고 및 신청(예정) ▪ (6월)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매뉴얼(지자체, 설립·운영 등) 배포 ▪ (6월) 보육교사 자격체계 개편 대책 마련
	3/4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8월~) 어린이집 부채현황 일제조사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협의(한어총 등) ▪ (9월) 신규 선정 확정 및 교육(예정)
	4/4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10~12월)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현황 정기점검 결과 분석 ▪ (11월) 개선방안 제도화 추진 ▪ (12월) '20년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선정 및 재선정 기준 확정 배포

□ 소요예산

○ 공공형어린이집

(단위 : 백만원, 명, 개소 등)

구 분	2018년 예산			2019년 예산(b)	증감 (b-a)
	예산(a)	확정예산(a)	집행액		
○ 사업량(단위 : 개소)	2,400	2,400		2,400	
○ 사업비(백만원)	107,487	107,487	107,487	110,882	3,395
- 국비	60,999	60,999	60,999	62,915	1,916
• 일반회계	60,999	60,999	60,999	62,915	1,916
- 지방비	46,488	46,488	46,488	47,967	1,479

과제 2

보육체계 개편

2-1

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 체계 개선

<과제 내용>

- ◇ 어린이집 보육 지원 체계개선 추진
- ◇ 부모 선택기전 보장과 적정 보상체계 마련

□ '18년 추진실적

- 부모, 어린이집 원장·교사,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「보육지원체계 개편 TF」 구성·운영('17.9월~'18.8월, 총 10차례 회의)
- TF 논의를 토대로 정책 토론회(8.7일), 부모 토론회(10.7일, 10.20일) 중보위 논의(10.25일)등을 거쳐 개편의 기본방향 마련
 -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로드맵에 반영(12.7일)을 통해 추진 기반 마련
 - 보조교사 확충(추경 6천명, '19년 예산 1.5만명)을 통해 「보육지원체계 개편」 추진에 필요한 보육교사의 우선 확보 병행
- 맞벌이 부모가 원하는 시간만큼 충분히 어린이집 이용시간 보장하는 문화 조성
 - '등·하원 시간 함께 정해요' 홍보 리플릿 및 '어린이집 운영시간 안내' 스티커 배포(3월)

□ '19년 추진계획

- '18년 수립된 개편방향이 반영된 「영유아보육법」 개정 추진 노력('19. 1/4분기)
-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실시('19~)
 - 개편방안 세부 기준 검토 및 제도 구체화를 위해 시범사업 추진
 - * 연구기관 공모·선정(1~3월), 시범사업 대상 지역·기관 선정(3월) → 참여기관 교육 및 교사 배치(4월) → 시범사업 모형 운영(5~8월) →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 보완(9~11월)
 -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연장보육료 및 전담교사 확충, 등·하원 알림 시스템 개편 예산 확보 추진

□ '19년 추진일정

시기		주요 내용
'19년	1/4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1월) 시범사업 계획 수립 ▪ (3월) 영유아보육법 개정 추진 ▪ (3월)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계획 수립
	2/4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5월) '20년 예산 부처안 반영 추진 ▪ (5월) 시범사업 시행
	3/4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9월~)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 보완
	4/4분기	

□ 소요예산

※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안 구체화에 따른 예산 검토 필요

2-2

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

<과제 내용>

- ◇ 표준보육비용 재계측
- ◇ 적정 보육료 지원 및 부모부담 기준 정비

□ '18년 추진실적

- '19년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하여 '19년 1월부터 0~2세 보육료 단가 6.3% 인상, 누리 운영비 및 누리교사 처우개선비 인상
 - (0~2세 보육료) 부모보육료 3.0% 인상 및 민간·가정어린이집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 시설에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보육료 10.9% 인상
 - (누리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) 누리교사 처우개선비 3만원 인상(30→33만원) 및 누리운영비 인상(8,120원↑)을 위한 예산(713억원) 확보
- 보육정책 및 환경변화를 고려한 적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표준 보육비용 산정 실시(육아정책연구소 '18.3~'19.2)
- 표준보육비용 계측 주기(3년) 및 결정방법(중앙보육정책위원회 의결) 등을 제도화(「영유아보육법」 개정('18.12월), 제도시행('20.1월))

□ '19년 추진계획

-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적정 보육료 지급기준 마련('19 하반기)
 - 표준보육비용 산정 연구 완료('19.2월) 및 결과 발표('19 上)
 - '20년 예산에 표준보육비용 산정 결과 반영 추진('19.5~8월)
- 표준보육비용 제도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및 시행('19.12월)

- 한시법 체계인 「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」 만료('19.12.31)에 대응한 후속 논의 및 누리과정의 안정적 추진기반 마련

□ '19년 추진일정

시기		주요 내용
'19년	1/4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2월) 표준보육비용 산정연구 완료 ▪ (3월) 표준보육비용 산정연구 최종 결과보고
	2/4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5월) '20년 예산 부처안 반영 추진
	3/4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8월) '20년 예산 정부안 반영 추진
	4/4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12월) '20년 예산안 국회 심의·확정 ▪ (12월) 표준보육비용 제도화 관련 하위법령 개정

□ 소요 예산

- 영유아보육료 지원

(단위 : 백만원, 천명)

구 분	2018년 예산			2019년 예산(b)	증감 (b-a)
	예산(a)	확정예산(a)	집행액		
○ 사업량(단위 : 천명)	728	728	728	701	△ 27
○ 사업비(백만원)	4,840,223	5,028,949	5,028,949	5,097,728	68,779
- 국비	3,257,470	3,384,483	3,384,483	3,405,282	20,799
• 일반회계	3,257,470	3,384,483	3,384,483	3,405,282	20,799
- 지방비	1,582,753	1,644,466	1,644,466	1,692,446	47,980

<과제 내용>

◇ 영유아 특성에 맞춰 표준보육과정 개선

□ '18년 추진실적

- '누리과정 개정 정책연구'('18.3월~'19.2월, 교육부 주관, 육아연 수행, 복지부 참여)를 통해 「3-5세 연령별 누리과정」 고시 개정안* 마련
 - 어린이집·유치원 교사 간담회(3회, 총 100명 참석), 자문회의, 공개토론회(서울·광주·제주 각 1회) 등 실시
 - * (개정 방향) 개별 유아의 다양한 특성 고려, 유아의 자유 놀이 권장, 현장의 자율성 확대
- 보육체계 개편 추진의 일환으로 장시간 보육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'어린이집 오후 보육프로그램 내실화 방안' 연구(9~12월, 육아연)
 - * 오후 일과 운영 방안, 물리적 환경 구성, 교사의 역할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

□ '19년 추진계획

- 「3-5세 연령별 누리과정」 고시 개정
 - '누리과정 개정 정책연구' 완료(2월) → 고시 개정안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(4~5월) → 고시 개정·공포(9월) → 시행('20.3월)
- 누리과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
 - 개정 누리과정 시범 적용 실시(4~11월)
 -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, 안내서 및 현장 지원자료 개발(~12월, 교육부와 합동)
 - 교사 연수 교재 개발(~12월, 교육부와 합동) 및 연수 실시(12월~)

- 「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」 고시 개정 및 해설서 개발
 - '표준보육과정 개정 연구(4~12월)' 통해 고시 개정안 마련(~9월) 및 해설서 개발(~12월) → 고시 개정안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(9~10월) → 고시 개정·공포(12월) → 시행('20.3월)
- 표준보육과정 교사 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(9월)
 - * 표준보육과정 교육과 보수교육 연계 등

□ '19년 추진일정

시기		주요 내용
'19년	1/4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2월) 누리과정 개정 정책연구 완료 ▪ (3월~) 누리과정 교사용 지침서(해설서) 개정연구 참여 ▪ (3월) 표준보육과정 개정 연구 계획 수립
	2/4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4월) 표준보육과정 개정 연구 착수 ▪ (4월~) 개정 누리과정 시범사업 실시 ▪ (4~5월) 누리과정 개정안 중보위 심의
	3/4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9월) 「3-5세 연령별 누리과정 고시」 개정·공포 ▪ (9월) 표준보육과정 교사 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▪ (9월) 표준보육과정 고시 개정안 마련
	4/4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10월) 표준보육과정 고시 개정안 중보위 심의 ▪ (~11월) 누리과정 교사 연수 교재 개발 ▪ (11월~) 개정 누리과정 교사 연수 실시 ▪ (11~12월) 개정 누리과정 시범사업 결과 보고회 ▪ (12월) 개정 누리과정 현장 지원 자료 개발 완료 ▪ (12월) 표준보육과정 개정 연구 완료 및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개발 ▪ (12월) 「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」 고시 개정·공포

□ 소요예산

-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, 현장 지원자료, 교사 연수 교재 개발 등에 약 20억원 소요 예정(교육부 예산)
- 누리과정 교사 연수에 연간 약 3억 5천만원 소요(기존 사업)
 - * 기존에 수행해오던 '누리과정 교사 연수 사업 예산으로 집행하므로 예산 추가 확보 불필요
- 표준보육과정 개정 연구에 약 5천만원 소요 예정

과제 3

보육서비스 품질 향상

3-1

보육교사 전문성 강화

<과제 내용>

- ◇ 보육교사 학과제도 도입
- ◇ 보수교육 과정 내실화
- ◇ 체계적 보수교육 운영을 위한 종합관리

□ '18년 추진실적

- 학과제 방식의 양성체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('18.5~11월)
 - 현행 학점 이수 방식의 개방형 양성체계를 아동·보육 관련 학과 중심의 자격 취득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마련 등
- 경력 단절 후 복귀자의 사전 직무교육 이수 의무화 추진
 -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('18.12월) 및 장기미종사자 교육과정 개발 연구용역 실시

□ '19년 추진계획

-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대학 보육 관련 학과 중심의 양성 체계로 개편하는 「보육교사 양성 대책」 마련('19.上)
 - 장기 미종사자 교육, 원장 실무교육, 중간관리자 교육과정 시행 등 교육대상자를 고려한 보수교육 개편방안 포함
- 장기 미종사자 교육 시행규칙 개정 완료('19.上)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 (교재개발, 강사진 교육 등 포함) 및 교육 시행('19년 중)

- 보수교육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**보수교육 총괄관리기관**(한국보육진흥원 예정) **운영 계획안 마련** 및 '19년 보수교육기관 **평가 시행**('19년 중)
- 보육교직원 **인적 정보를 통합한 DB구축**(보육교직원 정보 통합관리)을 위한 '19년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추진

□ '19년 추진일정 내용기재

시기	주요 내용
'19년	1/4분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2월)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계획 수립 ▪ (3월)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등 실무교육과정 개발 연구용역 추진
	2/4분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4월)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발주 및 계약 ▪ (6월) 보육교사 양성체계 및 보수교육 개편 종합대책 마련 장기미종사자 교육 관련 시행규칙 개정, 교육 시행 관련 세부 기준 마련
	3/4분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7월~) 보육교사 양성·자격체계 개편 대책 시행 ~ ▪ (9월~) 장기미종사자 교육 시행
	4/4분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10월~)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등 실무교육과정 교육 시행 ▪ (~12월) 보수교육 총괄관리기관 운영계획안 마련 ▪ (12월)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완료

□ 소요예산

- 보수교육지원

(단위 : 백만원, 명)

구 분	2018년 예산			2019년 예산(b)	증감 (b-a)
	당초예산	확정예산 (a)	집행액		
○ 사업량(단위 :명)	23,588	23,588	23,588	23,588	0
○ 사업비(백만원)	2,359	2,359	2,359	2,359	0
- 국비	1,232	1,232	1,232	1,232	0
• 일반회계	1,232	1,232	1,232	1,232	0
- 지방비	1,227	1,227	1,227	1,227	0

*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사업 중 보수교육 지원 및 보수교육기관 평가만 해당

3-2

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

<과제 내용>

- ◇ 보육교사의 적정 임금 지급 보장
- ◇ 보육교사 보조인력 지원 확대
- ◇ 교사 업무부담 경감

□ '18년 추진실적

-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 및 처우개선을 위해 **보조·대체교사 투입 확대** * 보조교사 ('18)25만명 → ('19)4만명, 대체교사 ('18)2천명 → ('19)2.7천명
 - 특히, '18.7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이용 보장을 위하여 보조교사를 '18년 추경 6천명, '19년 1만5천명 확보
- '19년 예산 심의 결과, 유아교육특별회계 713억원 추가 교부에 따른 **누리교사 처우개선비 인상(30만원→33만원)**
 - * 당초 누리교사 처우개선비의 복지부 일반회계 예산(858억원) 확보를 추진하였으나, 최종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특별회계에 반영하여 처우개선비 인상 결정
- **어린이집 업무환경 개선 및 자동화를 위한 BPR/ASP 사업 추진**
 - 수집된 등·하원 정보를 활용하여 보육료 신청 등 기존 수작업 방식을 전산화 및 자동화

□ '19년 추진계획

-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추가 확보한 **보조교사 1만 5천명 및 대체교사 700명을 차질 없이 확대 배치**

- 종일 보육 내실화 및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「보육지원체계 개편」 관련 인력 추가 확보
 - *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기본보육 + 연장보육으로 구분, 연장보육 교사 확보를 위해 기 확보된 보조교사 5만명(영아반 4만, 유아반 1만명) 외에 2만명 추가 확보 추진
- 영아반 담임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인상 재추진 (22만원→25만원)
- 현직 보육교사 대상 스트레스 해소 및 인성 함양 지원을 위한 인성교육 시행('19년 6,500명 대상)
- 안심보육환경 마련 및 어린이집 업무환경 개선 BPR/ISP 결과에 따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고도화
 - 학부모와 어린이집 정보공유 기능 개발, 등·하원 정보 취득 및 관리기능, 등을 통해 스마트 업무수행 체계 구축

□ '19년 추진일정

시기		주요 내용
'19년	1/4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1월~) '19년 추가 확보한 보조·대체교사 인력 확대 배치 추진 ▪ (2월) 안심보육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계획 수립
	2/4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3월~) 보육지원체계 개편 관련 인력 확보 및 교사처우개선비 인상을 위한 '20년 정부 예산안 반영 추진, 인성교육 시행 ▪ (4월) 안심보육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발주 ▪ (6월) 상반기 보조·대체교사 인력 확대배치 현황 점검 ▪ (6월~) 정부예산 및 국회 예산 심의 대응
	4/4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~12월) 정기적인 보조·대체교사 인력 배치현황 점검, 필요시 효율적 인력 배치를 위한 제도 개선 시행 ▪ (12월) 안심보육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완료

□ 소요예산

-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(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) +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(상담전문요원 배치)

(단위 : 백만원, 명)

구 분	2018년 예산			2019년 예산(b)	증감 (b-a)
	당초예산	확정예산 (a)	집행액		
○ 사업량(단위 :명)	236,465	242,465	242,465	262,962	20,497
○ 사업비(백만원)	710,322	730,290	730,290	939,352	209,062
- 국비	357,292	367,336	367,336	477,191	109,855
• 일반회계	357,292	367,336	367,336	477,191	109,855
- 지방비	353,030	362,954	362,954	462,161	99,207

○ 안심보육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

(단위 : 백만원, 개)

구 분	2018년 예산			2019년 예산(b)	증감 (b-a)
	예산(a)	확정예산(a)	집행액		
○ 사업량(단위 : 개)	1	1	1	1	-
○ 사업비(백만원)	1,872	1,872	1,872	1,681	△191
- 국비	1,872	1,872	1,872	1,681	△191
• 일반회계	1,872	1,872	1,872	1,681	△191

3-3 영유아 반 구성기준 개선

<과제 내용>

- ◇ 영유아 반 구성기준 개선
- ◇ 어린이집 시설 기준 강화

□ '18년 추진실적

- 탄력편성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탄력편성 제도 개선안* 시행('18.3월)
 - * (기존) 제한없음 → (개선) 재원아동 승급 시 반별 정원 초과(3월), 반 통폐합 시 잔류아동이 반별 정원 초과(3~5월) + 보조교사 배치(또는 탄력편성반 교사에게 추가수입 30% 지급)
 - 그 결과, '18.5월 기준, 전년 동기 대비 탄력편성 시설 55% 감소(8,747→3,923개소), 반 68% 감소(17,740→5,638개), 아동 66% 감소(23,210→7,871명)
-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('18.6.월)
 - 유치원과의 설치기준 격차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교사실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

□ '19년 추진계획

- 어린이집 설치기준 합리화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
 - 보육실 면적기준, 비상재해대비시설, 놀이터 설치기준, 유희공간 활용, 입지기준 등 어린이집 설치기준 전반에 대한 개선안 도출

□ '19년 추진일정

시기		주요 내용
'19년	1/4분기	▪ (2월) 어린이집 시설 설치기준 개선관련 연구용역 착수
	4/4분기	▪ (11월) 어린이집 시설 설치기준 개선관련 연구용역 완료

□ 소요예산 : 3천만원

3-4

상시적 품질관리 강화

<과제 내용>

- ◇ 모든 어린이집 대상 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
- ◇ 어린이집 지도점검 체계 개선
- ◇ 어린이집 건강 및 안전관리 강화
- ◇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여건 개선

□ '18년 추진실적

< 어린이집 평가제 도입 및 평가 체계 개선 >

- 모든 어린이집 대상 평가 의무화* 및 평가기관(한국보육진흥원) 법정화('18.12. 영유아보육법 개정, '19.6. 시행)

* 모든 어린이집 대상 주기적인 평가 실시, 아동학대 발생 및 중대한 법 위반 시 최하위등급으로 조정, 평가부담 수수료(100인시설 45만원) 전액 정부부담 등

- 아동안전·인권을 최우선 시하는 평가기준 마련*, 평가부담 완화** 등 평가체계 개선('18.10월,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)

* 안전·인권 관련 필수지표(1개) 및 필수요소(9개) 지정. 미충족 시 A 등급 판정 불가

** 평가 시 문서확인 대신 관찰·면담으로 평가하는 비중 확대

<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 >

- '사립유치원 비리' 이슈를 계기로 「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」 수립·발표('18.10.25,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보고, 보도자료 배포) 및 후속조치 추진

- 부정수급 의심* 2,064개소 집중점검(교차점검), 전수 지도점검(~19.上)

*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부정수급 의심유형 43종 중 ① 한 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한 경우 ② 아동 1인당 급간식비 ③ 회계보고 금액 과소 ④ 기타운영비 15% 이상 지출 여부 ⑤ 세입 대비 세출 차액 ⑥ 지출 및 수입계정 평균액 초과미달 ⑦ 세입액 대비 세출 계정별 금액 등 항목에서 추출

- **보육료 부정수급·유용 처벌 강화 추진**(’18.12월, 법률·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)
 - * **보육료 부정수급도 보조금에 준해 처벌**, 위반사실 공표대상 부정수급액 기준 강화(3백→1백만원)
- **점검 및 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직 및 인력 확충 예산 확보***
 - * 조사 인력 12명 신설, 상담 인력 1명→10명으로 확대(’19년 예산 731백만원 확보)
- **법무부, 행복e음 등 타 시스템 정보를 연계하여 상시 모니터링**
(45개 의심 유형 개발·운영) 및 **집중점검 등 지원**
- **부정수급·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한 위법행위 신고제 및 공익
제보자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**(’18.12월 법 개정)

<어린이집 건강 및 안전관리 강화>

- 「**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**」 수립·발표
(’18.7.24, 국무회의 보고, 보도자료 배포) 및 **후속조치 추진**
- **‘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’ 도입 및 설치 예산 지원***
 - * 박람회 형태의 **업체 설명회** 개최(8.31, 정부세종컨벤션센터), **수요 조사**(9월)
거처 20,488개소, 25,022대에 **국비 25억원 지원**(~’19.2월)
- **원장 및 지자체 관리 책임 강화, 예방교육 강화 등 추진 중**
 - * 통학차량 방치 사망 시 **시설폐쇄, 원장 자격정지 5년 등**(12.28, 법 개정안 입법예고),
△**지자체 평가 지표에 반영**(8월) △**동승교사 안전교육 강화**(12.10, 시행규칙
개정안 입법예고), △**사례 중심 아동학대 예방 교육** 교재 개발·보급(12월) 등
- **미세먼지, 석면 등 새로운 환경 재난에 대응한 영유아 건강보호 조치**
 - **미세먼지 안전기준**(대응매뉴얼) 마련, **공기청정기 보급***, 어린이집
석면조사(환경부 주관) 실시**
 - * 공기청정기 14,948개소 53,479대,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20,488개소 25,022대 설치(’18. 추경)
 - ** 조사 미의무 어린이집 2,500개소 모집 및 무료조사 실시(한국환경공단, 1,834개소
조사 완료, ’18. 9월 기준)

<어린이집 운영에 부모 참여 활성화>

- 부모의 일상적 참여를 보장하고 개방적으로 운영되는 '열린어린이집' 지자체형 3,404개소, 우수형 100개소 선정(장관상·현판 수여)
 - 부모모니터링 및 지자체의 지도점검 유예, 공공형 신규 선정 시 가점, 보조교사 우선지원 등 혜택 부여

□ '19년 추진계획

<모든 어린이집 대상 의무평가제 시행('19.6월~)>

- 평가제 시행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*(시행규칙) 개정(~6월)
 - * 평가결과 통보 절차 및 수수료, 평가등급 조정 관련 사항 등을 규정
-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평가지표 개선, 평가제 운영체계 개선안* 마련
 - * 공청회, 현장간담회, 상시 협의체 운영 등
 - ※ 평가제 전환과 병행하여 보육교사가 영유아보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관찰·면담의 비중을 높이고, 평가지표도 간소화 검토
- 참여제약(대표자 변경, 개원1년 미만)이 있는 어린이집을 제외한 전체 어린이집 평가 실시

(단위 : 개소)

구분	기존 인증 어린이집					미인증 신규평가	총계
	소계	1~5월 신청			6~12월 기간도래		
		기간도래	재참여/재평가	소계			
개소 수	8,219	3,741	467	4,208	4,011	4,239	12,458

<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>

- 어린이집 이용불편·부정신고센터 및 복지부 직접 현지조사 지원 조직 구성(~7월) 및 운영
 - * 복합적이며 심각한 민원에 대한 집중 상담 기능 향상, 지자체 역량 강화, 신속한 직접조사 등
- 어린이집 집중점검 및 전수조사 지속 실시
 - 지도점검 업무 효율화를 위해 점검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업무를 시스템으로 통합·관리하는 '스마트* 지도점검 시스템' 체계 구축
 - * 지도점검 시스템 입력으로 온나라 공문결재 가능, 점검대상 어린이집 사전 점검 기능, 점검계획부터 행정처분까지 통계기능 구축 등

<어린이집 건강 및 안전관리 강화>

- 공기청정기 설치·운영 전수 실태조사 실시(2월)
- 감염병, 미세먼지, 지진 등 각종 질병, 재난으로부터 어린이집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**유관기관*과 긴밀한 협조체제 확대**(연중 지속)
 - * 지진·화재 등 재난(행안부·소방청), 미세먼지·석면(환경부), 식중독예방(식약처), 통학차량안전(경찰청), 결핵 등 감염병 관리(질본) 등
-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**컨설팅* 확대**(총 120→200개소) 및 **교육****
 - * 분야별 전문가(보육, 소방, 통학차량)로 구성된 솔루션팀이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안전점검 및 컨설팅 제공, 시설 개선(안전물품) 지원
 - ** 보육교직원 대상 예방·대응교육 실시(약 43천명 목표), 영유아 대상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(총 100회 목표)
- 아동 건강·위생관리를 위한 정기(하절기·동절기) **안전점검 지속 실시**
 - * 하절기(6~7월), 동절기(11~12월), 각각 전체 어린이집 15% 실시

< 어린이집 운영에 부모 참여 활성화 >

○ 부모모니터링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내실운영 추진

- 모니터링시 의견청취 절차 신설, 개선의견에 대한 환류체계를 마련하고, 모니터링 지표 통합 감축, 결과 안내방식 개선을 통해 현장부담 완화

○ 열린어린이집 5,000개소* (10%) 이상으로 확대

- 우수형 폐지, 진입제한 완화 및 재선정기관 유효기간 연장 등을 통해 열린어린이집 선정을 위한 어린이집 및 지자체 부담완화
- 인센티브 조정(‘지자체 지도·점검 제외’ 삭제) 등 열린 어린이집 내실화 방안 마련

* 열린어린이집 현황(계획) : (‘17) 1,857개소 → (‘18) 3,404개소 → (‘19) 5,000개소

□ ‘19년 추진일정

시기	주요 내용
‘19년	1/4분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연중) 각종 질병, 재난(감염병, 미세먼지, 지진 등) 관련 유관기관 협조 체제 유지 및 확대 ▪ (1월) 열린어린이집 운영계획 및 가이드라인(홈페이지 등) 배포 ▪ (1월)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및 현지조사 지원 사업계획안 마련 ▪ (2월) 어린이집 평가제 운영체계(안) 공청회 ▪ (2월) 부모모니터링단 운영계획 및 매뉴얼 배포 ▪ (2월) 공기청정기 설치·운영 실태조사 ▪ (2~3월) 조직 및 사전 인력 충원, 이용불편신고센터 업무이관 ▪ (~2월) 어린이집 안전사업 부문별(보육교직원 안전교육, 이동안전체험관, 안전관리 컨설팅) 계획 수립 ▪ (3월) 부모모니터링 사업담당자 설명회
	2/4분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4월) 조사인력 현지조사(지자체 등 조사동행) 및 신고센터 관련 자체 교육 ▪ (4월) 부모모니터링 사업담당자, 단원 권역별 교육 ▪ (5월) 어린이집 평가제 운영체계(안) 심의(중보위) ▪ (5월)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 교육 ▪ (6월) 시행규칙 개정완료,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 ▪ (6~7월) 하절기 어린이집 안전 전반에 관한 복지부, 식약처, 지자체 합동 안전점검
	3/4분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7월) 부모모니터링 사업담당자, 단원 권역별 심화교육 ▪ (7월~) 현지 지도점검 지원(약70개소) ▪ (7월~) 신고센터 모니터링 및 민원 분석을 통한 지도점검 매뉴얼 보완 ▪ (8월~) 지능형 지도점검 시스템 구축 ▪ (9월)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 진행

시기	주요 내용
4/4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10월) 열린어린이집 선정 ▪ (10월) 인력확충을 통한 신고센터 및 현지조사 지원 강화 ▪ (11~12월) 동절기 어린이집 소방, 가스, 전기 등 민관 합동점검 ▪ (12월) 신고센터 및 지도점검 매뉴얼 마련

□ 소요예산

○ 어린이집 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

(단위 : 백만원, 개소 등)

구 분	2018년 예산			2019년 예산(b)	증감 (b-a)
	당초 예산	확정예산(a)	집행액		
사업량(단위 : 개소)	12,500	12,500	12,500	12,500	-
사업비(백만원)	8,226	8,226	8,226	11,786	3,560
- 국비	8,226	8,226	8,226	11,786	3,560
▪ 일반회계	8,226	8,226	8,226	11,786	3,560

○ 어린이집 이용불편 부정신고센터 및 현지조사 지원(신규)

(단위 : 백만원, 개소)

구 분	2018년 예산			2019년 예산(b)	증감 (b-a)
	예산(a)	확정 예산(a)	집행액		
○ 사업량(단위 : 개소)	-	-	-	70	신규
○ 사업비(백만원)	-	-	-	731	신규
- 국비	-	-	-	731	-
• 일반회계	-	-	-	731	-

※ 지능형 지도점검 시스템 구축 예산은 '안심보육환경 마련 및 어린이집 업무환경 개선' 사업비에 포함

○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

(단위 : 백만원, 개소 등)

구 분	2018년 예산			2019년 예산(b)	증감 (b-a)
	예산(a)	확정 예산(a)	집행액		
○ 사업량(단위 : 개소)	19,000	19,000	19,000	12,000	△ 7,000
○ 사업비(백만원)	2,262	2,262	2,262	1,757	△ 505
- 국비	1,131	1,131	1,131	905	△ 226
• 일반회계	1,131	1,131	1,131	905	△ 226
- 지방비	1,131	1,131	1,131	852	△ 279

과제 4

부모 양육지원 확대

4-1

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지원

<과제 내용>

- ◇ 부모교육 및 양육정보 제공 확산
- ◇ 가정양육서비스 확대

□ '18년 추진실적

-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('18.12월 기준 98개소)에서 **123,732명**의 부모·자녀를 대상으로 **6,983회** 부모교육 실시('18.12월 기준)
 - 신규 부모교육 프로그램 2종* 제공 및 입문·기초·심화 과정으로 커리큘럼의 단계별 체계화('18.5월)
 - * △ 영유아 발달 이해 부모교육, △ 부모 양육태도 점검 부모교육
-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맞벌이 부모 등을 위하여 **온라인 부모교육*** 개발·배포('18.8월)
 - * 클로버 부모교육 '멋진 아이' 골든벨·유레카 2종(8편)
-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60개소 확충 예산(30억) 확보

□ '19년 추진계획

- 신규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4종* 개발('19.3~8월) 및 복지로서 양육수당·보육료 신청 시 제공(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, '19.9월)
 - * △ 클로버 부모교육 '긍정의 가족', △ 자녀권리 존중 부모교육, △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, △ 양육스트레스 관리 부모교육 등 4종

- 국가와 지자체의 양육지원제도 안내 등 포괄적 양육정보 제공을 위한 가이드북* 제작 및 온라인 배포('19.4월)
 - * 포괄적 양육정보 안내 부모교육, 지역의 특색 있는 양육지원제도 등 포함
- 부모교육 접근성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부모교육* 확대(연중)
 - * 주민센터, 어린이집 등 부모들이 자주 찾는 장소에서 교육 실시
- 육아종합지원센터 3개소 확충*,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60개소 설치 지원
 - * 부산 사하구, 대구 수성구, 경북 구미시
- 영유아에게 미세먼지, 폭염, 혹한에도 안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모를 통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또는 분소형 놀이체험실 설치, 리모델링 등에 지원

□ '19년 추진일정

시기	주요 내용
'19년 1/4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연중) 전국 육아종에서 부모교육 지속 실시 ▪ (연중) 보육서비스 온라인 신청 시 동영상 제공 ▪ (1월) 육아종 공통부모교육 사업계획서 마련 ▪ (1월)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선정결과 통보 ▪ (2월) 온라인 부모교육 개발 계획 수립 ▪ (2월)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공모 ▪ (3월) 육아종 권역별 간담회(1차) 실시 ▪ (3~6월) 온라인 부모교육 개발
2/4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4월) 포괄적 양육정보 제공을 위한 가이드북 제작·배포 ▪ (6월) 육아종 권역별 간담회(2차) 실시
3/4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7~8월)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수기 및 우수운영사례 공모 ▪ (7~9월) 온라인 부모교육 개발·배포 ▪ (8월) 육아종합지원센터 공 모 ▪ (9월) 육아종 권역별 간담회(3차) 실시
4/4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11월)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▪ (12월) 육아종 공통부모교육 사업평가회 실시

□ 소요 예산

○ 부모교육 지원

(단위 : 백만원, 개소)

구 분	2018년 예산			2019년 예산(b)	증감 (b-a)
	예산(a)	확정예산(a)	집행액		
○ 사업량(단위 : 개소)	62	62	62	72	+10
○ 사업비(백만원)	2,556	2,556	2,556	3,073	+517
- 국비	1,128	1,128	1,128	1,368	+240
• 일반회계	1,128	1,128	1,128	1,368	+240
- 지방비	1,428	1,428	1,428	1,705	+277

○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

(단위 : 백만원, 개소 등)

구 분	2018년 예산			2019년 예산(b)	증감 (b-a)
	예산(a)	확정예산(a)	집행액		
○ 사업량(단위 : 개소)	101	101	101	103	
○ 사업비(백만원)	17,559	17,559	17,559	23,164	5,605
- 국비	8,931	8,931	8,931	11,789	2,858
• 일반회계	8,931	8,931	8,931	11,789	2,858
- 지방비	8,628	8,628	8,628	11,375	2,747

4-2

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

<과제 내용>

- ◇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
- ◇ 시간제보육 지원기준 개선

□ '18년 추진실적

- 지속적인 시간제보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제공기관 확대
→ 총 443개반(전년 대비 + 6개반) 운영
- 총 18,437명 아동이 33만건, 120만 시간의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
* 이용건수: ('17)29→('18)33만건(+15.2%), 이용시간: ('17)101→('18)120만시간(+19.2%)
- 가정양육 부모들의 이용 부담 완화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**이원화된 자격기준 통일 · 지원 확대** ('18.3월)
* (기존) 맞벌이 1천원 자부담, 월 80시간 / 기본형 2천원 자부담, 월 40시간 이원화 → (개선) 자부담 1천원, 월 최대 80시간 지원으로 일원화

□ '19년 추진계획

- 시간제보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**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속 확대**('19년 평균 483개반 운영 목표)
 - 지자체 수요, 이용실적, 개시가능성, 시설의 편의성 ·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상 · 하반기에 걸쳐 추가지정 추진
- 시간제보육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의 **현실화**('19.3월~, 지침개정 기 완료)
 - 시간제보육 정원 5명 → 3명으로 축소, 교사 대 아동비율 1:3으로 조정, 시간제 보육실 면적 기준 유지(13.2㎡ 이상)

- 시간제보육 이용실적 제고를 유도하고, 인건비·운영비 지원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인건비·운영비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차등화

* 이용아동 2명·이용건수 20건 이상시 인건비 100% 지원 → 이용아동 2명·이용건수 20건·이용시간 40시간 이상인 경우 70%, 이용아동 4명·이용건수 30건·이용시간 80시간 이상인 경우 100% 지원으로 차등지원 방식 도입

- 이용수기 공모전, 홍보 동영상 제작, 지역 맞춤형 홍보 등 시간제보육 사업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 홍보 추진

□ '19년 추진일정

시기		주요 내용
'19년	1/4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1월) 시간제보육 사업·운영 관리 위탁기관 선정 ▪ (2월) '19년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제작·배포 ▪ (3월) 시간제보육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의 조정 실시 ▪ (3월) 시간제보육 담당 공무원, 관리자, 보육교사 교육 실시
	2/4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4~5월) 상반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추가지정 ▪ (4~6월) 시간제보육 이용수기 공모전 실시
	3/4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7월) 인건비·운영비 지원기준 강화 및 지원금액 차등화 실시 ▪ (7~11월) 시간제보육 수시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
	4/4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11~12월) 하반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추가지정 ▪ (12월) '18년도 시간제보육 유공자 포상 및 성과보고회 개최

□ 소요예산

(단위 : 개반, 백만원)

구 분	2018년 예산			2019년 예산(b)	증감 (b-a)
	당초 예산	확정예산(a)	집행액		
사업량 (단위 : 개반)	443	443	443	483	40
사업비(백만원)	19,348	19,348	19,348	21,911	2,563
- 국비	9,724	9,724	9,724	11,006	1,282
▪ 일반회계	9,724	9,724	9,724	11,006	1,282
- 지방비	9,624	9,624	9,624	10,905	1,281

4-3

취약보육 지원 개선

<과제 내용>

- ◇ 취약보육 대상 재검토 및 실태조사
- ◇ 취약보육 특성별 보육지원 개선

□ '18년 추진실적

- 24시간 어린이집 실태 전수조사(8월) 및 지정운영 개선방안* 마련(12월)
 - * 신규 지정 시 국공립·법인·직장 유형으로 제한(기존에는 유형 제한 없음)
하도록 '2019 보육사업안내 지침' 개정
-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지속 확대
 - 장애아전문·통합 어린이집 확충('18년말 1,177개소, '17년 대비 +53개소), 장애아보육료 '18년 대비 7.0% 인상(부모 보육료 3.0%, 기본보육료 10.9%)
 - * '19년 1,005천원(부모 462천원, 기본 543천원)
- 장애아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추진
 - 장애아반 담당 교사에 대한 인건비 단가 2.3% 인상, 장애아동 담당 보육·특수교사 수당 월 20 → 30만원으로 인상
 -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우선 지원 규정 마련 및 1명 추가 지원
- 보육실태조사를 통해 취약보육 현황 및 요구 파악

□ '19년 추진계획

- 시간연장어린이집 운영 개선 방안 마련 및 시행
 - 보육료 지급 기준 변경 등을 통해 보육료 수입 증대 효과 도모, 시간연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액 현실화를 위한 '20년 예산 확보

○ 24시간 어린이집 지정·운영 개선 시행

- (지정 관리 현행화) 실제 24시간 보육 미운영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함으로써 실수요에 기반한 24시간 어린이집 지정·운영(1월~)
- (유형 제한) 신규 지정은 국공립·법인 등 정부지원시설·직장으로 제한(3월~)

○ 취약보육 실태 분석을 통한 취약보육 대상 재검토

○ 다문화가정 아동·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원 확대

-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 장애영유아 보육 제공기관 확대(장애아전문 2개, 장애아통합 지정), 다문화·장애영유아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과정 체계화 지속

□ '19년 추진일정

시기		주요 내용
'19년	1/4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3월) 취약보육 실태조사 결과 활용 및 취약보육 대상 분석 ▪ (3월)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개선 방안 마련 및 관련 지침 개정 ▪ (3월)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현행화
	2/4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5월) 시간연장 인건비 현실화('20년 예산 부처안 반영 추진) ▪ (6월) 취약보육 담당 보육교직원 교육과정 체계화 검토 ▪ (2분기~) 취약보육 담당 보육교직원 교육 시행(진흥원)
	3/4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8월) 시간연장 인건비 현실화('20년 예산 정부안 반영 추진)
	4/4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12월)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확충 완료 ▪ (12월) 시간연장 인건비 현실화('20년 예산 국회 심의 통과 추진)

□ 소요예산

- '19년도 시간연장보육 보육료 25,334백만, 시간연장교사 인건비 59,122백만원
- 장애아전문·통합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예산 (단위 : 백만원, 명)

구 분	2018년 예산			2019년 예산(b)	증감 (b-a)
	당초 예산	확정예산(a)	집행액		
사업량(단위 :개소, 명)	4,635	4,635	4,635	4,856	221
사업비(백만원)	119,855	119,855	119,855	133,044	13,189
- 국비	60,287	60,287	60,287	66,921	6,634
▪ 일반회계	60,287	60,287	60,287	66,921	6,634
- 지방비	59,568	59,568	59,568	66,123	6,555

* 지방비는 평균 보조율 기준으로 산출